

단체장·고위 공무원 '내사람 심기' 인건비 가중 정규직 못 뽑을 지경

'현대판 음서제' 전략 무기계약직 공무원

쌍 활짝 열린 공직 뒷문

단순노무나 사무보조를 맡고 있는 무기계약직(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의 수가 시·군 정규직 공무원 수의 3분의 1에 달할 정도로 양산되고 있다. 이들의 증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 부담도 나날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정식 절차를 거친 정규직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무기계약직과 기간제의 급증은 업무가 중이나 다양화 등의 공직 수요보다는 단체장이나 고위공무원의 '자기사람 심기'가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서류전형이나 면접만 거치면 되는 간편한 채용 방식, 관리·감독 부재, 내부 비정규직 제도 개선 분위기 등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

전남 22개 시·군 직원수

무기계약직 등이 30% 차지

채용·전환 과정도 불투명

◇'무기계약직 되기' 경쟁 갈수록 치열 =전남 22개 시·군은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는 모두 무기계약직 신분으로 바뀌주는 대책을 수립해 시행중이다. 그러나 기존 인건비도 주기 어려운 재정 형편을 감안, 이들 시·군은 연차별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신분 상승'을 시켜주고 있다. 그 과정에서 나주시 등은 편법을 써 '무기 기간제'라는 새로운 직종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임금은 기간제 수준으로 주고, 계약기간 제한만 없었던 것이다. 이렇다 보니 무기계약직이 되기 위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행정자치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기간제만이 아니라 무기계약직을 신규 채용하면서 이 같은 난맥상은 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기간제의 경우 4대 보험은 가입되지만 1일 단가가 4만2500원으로, 최저임금(4만1680원, 시간당 5210원)을 약간 웃도는 임금을 받는 등 처우가 열악하다. 이에 반해 각 시·군마다 다르지만 전남도의 경우 무기계약직은 13분 연봉이 2379만8000원으로, 정규직 공무원 9급 1호봉(2093만4000원)보다 높다.

◇무조건 뽑는 지자체, 행·재정 낭비 초래 =전남도의 감사 대상이 된 10개 시·군의 공통점은 기간제와 무기계약직이 동

22개 시·군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현황

<단위:명>

분류(정규직 공무원 정원·현원)	무기계약직(청원경찰 등 포함)				기간제 근로자			
	2010.04	2013.04	2014.04	2015.04	2012.04	2013.04	2014.04	2015.04
목포(1,127·1,105)	193	239	236	220	251	266	275	-
여수(1,692·1,680)	319	346	349	359	241	232	223	208
순천(1,336·1,266)	319	320	353	362	-	144	178	183
나주(960·937)	140	164	178	179	79	108	154	194
광양(924·889)	171	170	169	190	269	219	325	333
담양(580·570)	89	92	144	144	-	-	-	102
곡성(558·534)	90	84	106	120	69	62	53	40
구례(493·481)	139	131	160	178	65	67	45	68
고흥(769·757)	204	188	181	221	123	135	147	104
보성(590·563)	142	153	184	184	69	65	99	99
화순(347·333)	180	201	216	220	95	131	138	140
장흥(563·519)	144	168	172	216	78	86	71	38
강진(560·559)	136	149	183	180	35	55	52	44
해남(755·708)	207	230	244	240	23	24	30	45
영암(679·639)	147	167	187	184	147	109	149	141
무안(624·613)	136	142	135	135	-	140	183	111
함평(534·514)	64	81	81	118	-	-	-	102
장성(582·543)	101	100	121	121	-	-	-	-
영광(652·629)	190	165	187	187	100	91	62	67
진도(531·509)	112	112	138	177	111	109	96	54
신안(707·675)	184	240	276	266	-	88	88	125
계	3,499	3,744	4,117	4,320				

시에 증가하고 있으며, 채용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자격을 갖춘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바꿔주기보다는 부실한 자격 검증을 통해 특장인을 무기계약직으로 신규 채용하거나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준 것이다.

광양시의 경우 지난 2010년 171명이던 무기계약직이 2015년 현재 190명으로, 2012년 269명이던 기간제가 2015년 현재 333명으로, 각각 19명과 64명이 증가했다.

목포시 역시 같은 기간 무기계약직이 193명에서 220명, 기간제가 251명에서 275명, 보성군은 142명에서 184명, 69명에서 99명으로 많아졌다. 구례군도 2010년에 비해 무기계약직이 39명, 2012년에 비해 기간제가 3명 각각 늘었다.

신안군의 경우 2010년 무기계약직이 184명이었으나 올해 266명으로, 2013년 88명이었던 기간제는 125명으로 급증했다. 화순군도 마찬가지다. 2010년 180명이었던 무기계약직이 6년만에 220명으로, 기간제 역시 2012년 95명에서 140명으로 각각 늘었다.

무기계약직 채용과 기간제의 무기직 전환에 대한 투명성이나 공정성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합평·영광·담양 등은 과거 기간제 통제가 없거나 올해부터 통제가 작성이 들어가는 등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준인건비 한계, 정규직 못 뽑을 수도 =전남도는 지난 2007년도 총액인건비 인력산정 기본 모형에 따라 자치단체별 기준인력을 최초 산정한 후 매년 국정과제, 지역현안 등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 수정·보완해 사용하고 있다. 기준인건비는 공무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등 기준인력에 인건비 단가를 곱하고, 여기에 청원경찰 및 임기제 공무원 등 기타직 인건비와 물건을 더해 산정하고 있다.

즉 22개 시·군이 뽑을 수 있는 인력에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여수시의 올해 기준인건비는 1316억9313만4000원으로 가장 많고, 구례군이 390억7086만 원으로 가장 적다. 특히 무기계약직이 늘어날수록 정규직 공무원의 채용 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무기계약직이 많은 지자체의 경우 3년, 그렇지 않은 곳도 5년이면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투명하게 채용하고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 20·30대는 물론 40·50대까지 엄청난 경쟁을 하는데, 쉽게 무기계약직이 된다는 지적이 있어 감사에 나선 것"이라며 "공개모집 없이 이력서만 받아 선발하거나 형식적인 면접을 거치는 등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윤현기기자chadol@kwangju.co.kr



문형표(가운데 노란상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메르스 확산 방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메르스 밀접 접촉 고위험자 시설 격리

보건복지부 "대상자 생계지원 방안 마련...3차 감염은 없어"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메르스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들 중 고위험 대상자를 별도 선별해 안전한 시설에 격리 조치하겠다고 31일 밝혔다.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초기 대응이 지나치게 허술했다는 비판을 의식해 특단의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메르스 확산 방지 브리핑에서 "시설 격리 조치자는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되고 의료진이 별도 관리를 통해 14일간 지속 관찰한다"며 "시설 격리 조치로 생업에 지장을 받은 대상자는 지원 계획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감염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3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해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을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일정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 시킬 수 있다. 시설 격리자는 구체적으로 메르스 환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 가운데 연령이 50세 이상이거나 동시에 당뇨, 심장병, 신장병 등이 있는 만성 질환자가 대상이다. 해당자들은 2군데 시설에 격리되며 그 규모는 전체 밀접 접촉자 대상자 중 약 35% 내외가 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대한감염학회 김우주 이사장은 메르스 바이러스 변이 가능성에 대해 "현재까지 바이러스 변이는 없다"며 "정확한 확인을 위해 국내외 4개 기관에서 바이러스 유전자 변이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3차 감염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환자는 모두 첫번째 환자와 연관된 환자"라며 "단기간에 환자가 많이 발생한 것은 특수한 의료 환경에서 생긴 것이며 3차 감염이 아

닌 군집 발생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권준욱 메르스중앙대책본부 기획총괄반장은 메르스 환자가 거처한 병원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특정 시기를 전후해 그 병원에 계셨던 분들만 조사하고 있는데 병원을 공개할 경우 다른 시기에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했거나 의료기관에 종사했던 분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브리핑에 참석한 문 장관은 "메르스 전파력 판단 미흡과 최초 메르스 환자 접촉자 그룹의 일부 누락 등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와 불안은 끼친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이번 메르스 환자 발생은 특정 병원내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며 "이 병원에 대해 휴원조치를 취했고 입원 환자 전원에 대해 격리해 철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잠복기 2주 지나...메르스 이번주 중반이 고비

메르스의 확산세는 국내 최초 감염자가 격리된 뒤 최대 잠복기인 2주가 지난 이번주 중반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당국의 예상대로라면 이 시기가 지나면 환자 수 증가세가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보건당국의 통제를 벗어난 사례도 있는 만큼 3차 감염자가 발생한다면 확산세는 오히려 커질 수도 있다. 31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최초 감염 환

자로 그동안 14명의 2차 감염 환자를 발생시킨 A(68)씨는 지난 20일 국가 지정 격리병상으로 옮겨졌다. 이 때 A씨가 격리됐으니 이후에는 2차 감염의 원인이 되는 밀접 접촉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일부터 메르스의 최대 잠복기인 2주가 지난 뒤인 오는 3일부터는 2차 감염자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된다. 다만 그 이전에 A씨와 밀접 접촉했지만 그동안 미처 보건당국이 격리 관찰 대

상자로 관리하지 못했던 감염자가 나올 수는 있다.

보건당국은 첫 환자 발생 직후부터 2주를 메르스 확산을 위한 '골든 타임'으로 보고 그동안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2차 감염자 14명 모두 15~17일 A씨와 밀접접촉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확산세는 이번 주 초부터 꺾일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특히 올해는 광복 70주년과 분단 70년이 되는 해로서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하게 느껴집니다.

이처럼 뜻 깊은 달을 맞이하여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기립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나라를 위해 신명을 바치신 선열들의 고귀한 헌신 위에 이룩되었습니다.

조국 광복을 위해 고귀한 목숨을 초개와 같이 던지신 수많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우리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젊음을 바친 참전용사,

그리고 불의에 항거하여 민주주의를 꽃피운 분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정부는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명예를 드높이고 애국정신을 받드는 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분들이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받고 우리 사회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훈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우리는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를 더욱 부강하고 평화롭고 정의로운 나라로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반도가 분단된 지 70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북한은 크고 작은 도발행위를 거듭하며 우리에게 대한 위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국가안보를 더욱 굳게 다져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안보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강력한 국방태세를 갖추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온 국민이 호국정신을 바탕으로 하나가 되어 평화통일의 큰 길을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와 번영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모든 것을 바쳐 나라를 지키신 분들의 희생에 보답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번 호국보훈의 달이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며 우리 국민 모두의 힘을 결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 6. 1.
국무총리 직무대행 최경환